

임시국회 덮친 '김태우 폭로'

한국당 "靑 민정실 책임져야"...민주 "野 정치 공세" 정동영 "정부 대응 안이"...남선 대립에 현안 뒷전

여야는 20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수사관이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해 폭로를 하고 있다며 이를 야당이 정치공세를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론을 제차 강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수사관이) 자기 비위를 덮기 위해 폭로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와대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사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반대 세력을 방해하고 기업 후원 모금, 환경단체 핵심 인물 감찰 등을 했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실종자 가족과 단원고 학생을 불법 사찰한 것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사찰"이라며 "민간인 사찰은 이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문재인정부 유전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한 말에 대해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으니 어떻게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나"라며 "이 정부는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목살했다는 게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것만으로도 이 정부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전날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문건 목록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민정라인은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겨냥한 모양새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특검 도입을 놓고도 충돌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운영위 소집 요구에 공조하면서 국조·특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

에서 "즉각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당사자인 조국 수석을 출석시켜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것이 (여당 주장대로) 정치공세인지, 국조를 할 사안인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범죄자 얘기에 근거해 공당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고 발끈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김 수사관 폭로 공방에 대해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웃로비' 사건과도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 여당의 대응이 안 이하다"며 "웃로비 사건은 실제적 진실은 별 것 아닌 것으로, '태산 명동에 서일팔'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드러났지만 그 과정에서 정권이 엄청난 치명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성태 딸 KT 특혜 채용 의혹

한겨레 신문 보도... "계약직 채용·정규직 전환 과정 수상"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해 2월 퇴사했다.

이 신문은 당시 KT 스포츠단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와서 채용이 진행되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김씨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KT 인재개발실 관계자는 이 신문에

"김씨는 2011년 4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2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2013년 1월 정규직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됐는데 이후 신입사원 연수 도중 1월 말에 퇴사한 후 4월 KT 스포츠 분사에 맞춰 특채로 재입사했다"고 말했다.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로 합격한 뒤 한달 만에 스스로 퇴사하고 두 달을 쉬었다가 KT 스포츠 분사를 계기로 특채로 재입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는 "해당 직원과 관련해서는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채용했다는 것 외에는 더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도 "허무맹랑한 소설이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몰타기"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한발짝도 못 댄 '유치원 3법'

교육위 개정안 병합심사 회계·차별 조항 이견 여전

여야는 20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거듭 충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병합 심사했다.

쟁점은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등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회계로 일원화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차별조항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형량을 낮추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하자 한국당 의원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조승래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행령으로 다룰 사항이 있고, 법으로 다룰 사항이 있는데 법이 안되니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똑같은 취지에서 형사처벌만이 답이라는 것은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등 '유치원 3법'의 주요 쟁점 논의도 남아

있어 이날 소위에서 결론이 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교육위 관계자는 "이렇게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경우 조승래 법안소위원회장이 3당 안을 그대로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절충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위는 정기국회 동안 5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고, 결국 회기 내 처리는 불발됐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날 교육위 소위에서 합의가 안되면 오는 27일 본회의가 차라리 사실상 어렵다"며 "끝내 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지지율 46.5% 취임후 최저

긍정·부정평가 0.3%p 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46.5%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 내린 46.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 중반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취임 후 최저치는 3주 전인 11월 4주 차에 기록한 48.4%였다.

'국정 수행을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6%포인트 내린 46.2%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0.3%포인트에 불과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58.9% vs 30.8%)에서 가장 큰 내림폭(8.3%포인트)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0.9%포인트 오른 37.9%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1.6%포인트 상승한 25.7%로, 25%선을 회복했다. 정의당은 0.8%포인트 하락한 7.9%였다. 바른미래당은 2.1%포인트 내린 4.9%를 기록, 통합 정당 후 처음 4%대로 떨어졌다. 민주평화당은 0.7%포인트 올라 다시 3%대를 회복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선거제 개혁 당내 의견 수렴

비공개 토론회...연동형 비례제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 당내 의견을 모으고자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오늘 정치개혁위에서 본격적인 쟁점 토론을 시작한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며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개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특위에 속하지 않은 일반 의원들도 참석해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와 문우진 아주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확한 개념과 제도를 둘러싼 쟁점 해결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시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국회에 '중심 정당'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1566-9988

8 5 1
16524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371280
462810973

576214302
48178902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